

남중국해 완승했지만 기뻐할 수 없는 필리핀

중재재판소 판결 강제력 없어
중 전투 태세·美 항공모함 배치
무력 충돌 위기에 긴장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재판에서 완승을 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처지에 놓였다.

우선 판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사태에 들어가고 동맹국인 미국은 중국에 판결 수용을 압박해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이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GMA 방송 등 필리핀 언론들은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짐을 싸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



필리핀 시민들 뿔났다 필리핀의 한 시민 운동가가 군함 시에라마드레호 모자를 쓰고 12일(현지시간) 마닐라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反)중 시위에 참여했다. 시에라마드레호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 필리핀명 카롤루안 응 칼라얀)에 1999년 좌초된 채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했다. 채스 프리먼 전 미국 외교관은 PCA 판결을 놓고 “필리핀의 전술적 승리이자 국제법의 패배”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판결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문제가 힘으로만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필리핀에서는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겠지만, 중국의 반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 무력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면 무조건 판결 수용을 압박해 남중국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하고 중국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PCA 판결 직후 질제민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전문가들이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관련국은 자제력과 냉철함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에 PCA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PCA 판결을 앞두고 수도 마닐라에서는 수백명의 시민과 사회운동가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의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연합뉴스

■ 특별기고 ■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동영

국회의원
국민의당·전주시병

사드 배치 결정은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불신임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을 제2당으로 밀어낸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요, 국회에 대한 무시요, 야당에 대한 무시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서상의 합법성과는 별도로 역사적인 합법성이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사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 관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중, 한·러 관계없이 사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는 양자택일의 시대 아니다. 동서냉전에서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시대 아니다. 지금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중국의 부상 속에서 버퍼-존 즉, 미얀마, 베트남, 한국 등 완충 국가군이 형성되어 있다. 미얀마와 베트남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점으로 활용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외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실질 이익을 포기하고 러중북 3강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다.

실증적인 방식으로 판단해보자. 사드 1개 포대는 6기 48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은 3분 내에 60km 거리까지 도달하는 6000문의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장사정포는 사드로 막을 수 없다.

또한 실전배치가 완료된 스킵미사일일은 사정거리가 700km이고, 노동미사일은 1400km이다. 이런 것들이 무려 1000기나 실전 배치되어 있다. 이들 미사일에 10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그것이 1000기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실체다.

정부에 묻는다. 사드 1개포대로 1000발, 1000기의 스킵미사일, 노동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가? 장사정포는 무엇으로 방어할 것인가?

결국 군비 경쟁은 해법이 아니다. 지금은 군사주의의 시대 아니다. 해법은 외교다.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었던 개성공단 개선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펜타곤을 방문했다. 당시 미국은 개성공단 설립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내오수장인 럽스펠드 장관을 설득했다.

6000문의 장사정포로부터, 1000기의 스킵미사일로부터 한미동맹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개설해야 한다는 논리로 럽스펠드를 설득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군사주의가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난항에 빠졌던 6자회담을 되살려낸 것이 우리나라가 주도했던 2005년 9·19공동선언이다. 9·19공동선언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핵 문제를 타결하는 것은 외교다. 1차 1994년 핵 위기를 해결한 것도 클린턴 정부의 북북대화였다.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는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특사는 실제로 1994년 10월 외교적 합의로 북한 핵 위기를 넘어섰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우라늄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시 정부는 선제타격론, 즉직계타격론 등 영변을 폭격하자는 노선을 갖고 있었지만 3자회담을 거쳐서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틀로 결국 2차 핵 위기도 넘어갈 수 있었다.

2차, 3차,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실험에 대한 MB정부,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사드이다. 사드는 역사적 오명이다. 우리를 위해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단호히 거부하고 철회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박근혜정부가 말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드는 또 무엇인가? 방어는 무엇인가?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데, 바로 이 사드가 비핵화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UN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어울배반이다. UN 제재전선에서 중국의 이탈이 볼 보듯 뻔한 것 아닌가. 모순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치명적인 재앙이고 망국적인 선택이다. 경제를 망치고, 안정을 망칠 것이다. 또한 한미일 남방삼각, 중러북 북방삼각이 대치하는 구도 속에서 무슨 평화통일 전략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는 어찌 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왼쪽)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유세 현장에서 대선후보 경선 라이벌이자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지지 샌더스 ‘절반의 성공’

아웃사이더 돌풍의 주역인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경선 라이벌이자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지난해 4월말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41일 만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오전 뉴햄프셔주(州) 포츠머스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 승리를 축하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또 “그녀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나는 그녀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미국인의 요청들과 우리가 직면한 매우 중대한 위기의 해법과 관련돼 있으며, 11월 대선 최고의 후보가 클린턴 전 장관이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6일 대의원 매직넘버에 도달한데 이어 같은달 14일 워싱턴DC 프라이머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대선후보가 됐으나 7월 전당대회까지의 완주를 고수한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하지만 그가 당 대선후보를 공식 선출하

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를 12일 앞두고 이처럼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과 지지층은 그녀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칠 전망이다.

다만 기성 워싱턴 정치에 실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아웃사이더인 샌더스 의원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층이 이날 지지 선언을 계기로 곧바로 힐러리 지지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공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에서 볼거진 불신과 특권적 이미지, 친(親)부자 이미지 등으로 인해 그녀가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자리매김된 탓이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441일간의 대권 도전 무대에서 이날 퇴장한 74세의 노정권 샌더스 의원의 도전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기성정치에 대한 민심의 실망과 분노를 바탕으로 정치혁명과 소득불평등 타파 등을 내걸고 경선 레이스 내내 클린턴 전 장관을 몰아세웠던 샌더스 의원의 결국 주류 정치의 높은 벽에 막혀 패자가 됐다. 하지만 민주당 경장과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공약에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개혁과 대학 무상 교육 등 자신의 진보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연합뉴스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평 ★
LG 3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5분 (승복시장)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2분
토지 359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 발생

▶ 매가 30억

①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고덕 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주]대신건설 시행개발 전문 010-6670-9800 010-7384-7800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3면 대리석 시공/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62-511-7800
010-6832-9700